

“美 반도체법, 경영침해·기술 노출 우려… 투자조건 부담”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려 표명
“보조금 지급 조건 대응 까다로워
기업들,美 투자 매력 낮아질 것
초과이익 환수, 협상여지 꽤 남아”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제조시설 인센티브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초과이익환수 등의 투자 조건이 부담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또 조건들의 성격도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이 기업들에게 많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

액공제 25%를 받지만,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경영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급자 정보를 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든지 여러가지 경영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기술정보도 상당 부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업들의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담들이 있어 미국 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이나 미국 투자가 매력이 좀 낮아질 걸로 기업들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초과이익 환수 기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하고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추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미국측으로부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3월 중 가드레일에 관한 구체 방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기본 원칙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상적 경영 활동에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면 그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한 조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세종=원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주 제2공항 ‘청신호’… 환경부, 조건부 동의

도의회 동의 과정서 결정 뒤집힐 수도
지역 주민에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제기되는 쟁점, 검토·반영 해야

제주도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건설 사업 확정으로 보긴 이르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관은 제주도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했다. 제2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1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만 약 6조66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약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습굴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

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습굴 영향 등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환경부는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사업 전체에 부동의 의견을 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용수 기자 won@

SK하이닉스·LGD, 여성 사외이사 2명 확보

▶▶ 1면 ‘막 오르는 주총시즌’서 계속

현대차는 이사회도 확대한다. 사내 이사에 호세 무뇨스 사장을, 사외이사에는 임기가 끝나는 최은수 변호사 대신 장승화 서울대 교수와 최윤희 건국대 교수를 새로 선임한다.

여성 사외이사 확대도 올해 주총 주요 안건이다. 현대차는 새로운 사외이사 2명을 모두 여성으로 채우면서 비중

을 17%에서 29%로 확대했다. SK하이닉스도 김정원 김연장 고문을 신규 선임하며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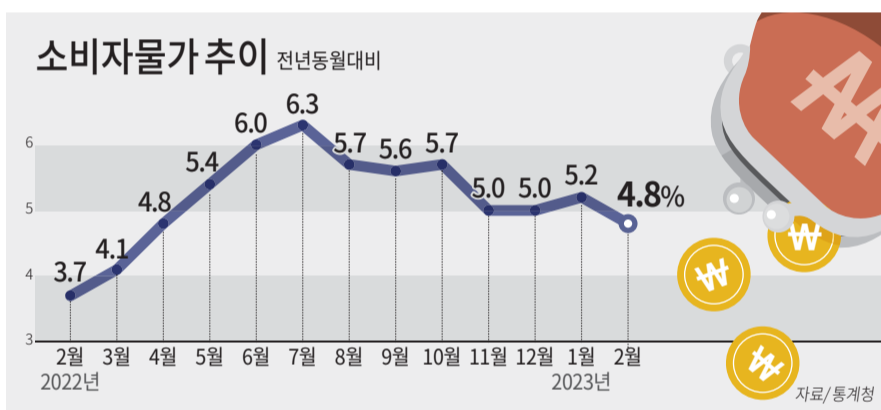
LGD디스플레이도 21일 열리는 주총에서 박상희 카이스트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여성 사외이사를 2명 확보할 계획이다.

그밖에 SKC와 SK에코플랜트, 삼양

사 등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냈다.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은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한발 앞서는 조치다.

한편 포스코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고희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가, 지역 사회 등 반대가 거세지면서 다시 포항으로 이전을 결정할 상태다.

/김재용 기자 juk@



소비자물가 4.8% ↑… 열 달만에 5% 아래로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축수산물 등 1.1% 상승 그쳐
전기료·도시가스 등 최대폭 증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졌다. 5%대 고물가가 이어져 온지 10개월 만이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농축산물 가격, 석유류 등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는 가정 하에 향후 물가는 이 같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상승 폭만 보면 지난해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가 유지되다 2월 들어 4%대로 하락했다. 열 달만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밑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1.1% 상승에 그쳤다. 농산물 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 풋고추(34.2%), 양파(33.9%), 파(29.7%), 오이(27.4%) 등 채소류는 올랐지만, 토마토(-14.8%)와 딸기(-7.8%), 사과(-6.9%) 등 과일류와 쌀(-8.1%) 등은 내려갔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0% 하락했다. 국산 쇠고기(-6.1%),

수입 쇠고기(-5.2%) 등이 내린 영향이다. 최근 대형마트 등 축산물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2019년 9월(-0.7%)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기름값 인하도 물가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1.1% 하락했다.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에 내려갔다. 휘발유(-7.6%), 자동차용 LPG(-5.6%) 등이 내렸고, 경유(4.8%), 등유(27.2%) 등이 올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4% 상승했다.

전기료(29.5%),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등의 인상으로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5.7% 올랐다. 생선(7.8%) 등 외식 물가가 7.5%, 외식 외 서비스 물가가 0.7% 각각 상승했다.

전세(1.6%), 월세(0.6%) 등이 오르면서 집세도 1.1% 상승했다.

채굴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3.6% 올랐다.

정부는 이작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원용수 기자